

광주 5대 문화권 주제별 특성화 우선사업 추진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 발표 문화발전·미래창조·문화다양성 설정 각 문화권 연결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속 가능한 창의 융합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의 5대 문화권 특성화와 공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별 추진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22-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기간이 5년 연장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 운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성사업은 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

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번 3차 수정안은 '아특법' 개정을 계기로 연장된 사업 기간에 조성 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창의융합 문화거점도시'를 목표로 조성사업 4대 역점과제를 '선택과 집중', '연계와 확산', '효율과 분권' 방식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광주가 문화적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5대 문화권을 주제별로 특성화하고 우선 사업을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권 내 주요 자원 간, 문화권 간 연계를 촘촘히 해 광주시가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발전, 미래창조, 문화다양성'의 3대 문화발전 축을 설정하고 각 문화권을 연결해 도시 전체의 입체적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화발전축으로서의 전당 운영의 활성화도 중요 사안이다. 아시아문화 연구를 비롯해 교류, 콘텐츠 창작을 담당하는 전당과 문화서비스 운영,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전당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의인력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예술도시로서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시각매체예술을 브랜드화해 아시아시각예술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문화기술 특화, 아시아문화 지식재산권 육성, 문화예술데이터 중심지 건립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실감콘텐츠,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등의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이를 콘텐츠로 연계하는 부분도 역점 사업이다. 예술관광 4대 권역(전당, 비엔날레, 양림, 무등산)을 토대로 광주의 예향, 미향, 의향을 체험하게 하고 나아가 남서권 관광개발과 연계해 광주가 지역관광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수정안에는 국제화시대 광주를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문화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당과 광주시의 교류 협업을 매개로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4대 역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과 함께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작단계(22-25년), 확산단계(2026-2028년)로 나눠 성과를 관리하고 사업 주체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서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반 구성 정밀조사 전남도, 확산 차단 온힘

전남도가 화순 도곡면 원화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이 있는 소나무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1그루가 감염목으로 판정돼 14일 긴급 초동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화순군, 인근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화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장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어 긴급방제체제에 돌입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시기·원인·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역학조사반을 구성, 피해지역 현장조사를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선충병 피해감염목은 대책회의 후 신속히 제거하고, 드론 예찰과 QR코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선단지, 확산 우려지역 합동 예찰조사를 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리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순서 신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은 초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도민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햇빛발전소 지원사업 광주시, 참여자 공모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에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 지원을 위해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발전 규모에 제한없이 지원하며, 에너지 전환에 참여 연합체는 100kW 미만으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평가항목은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시공능력의 우수성 ▲주민 참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자금 조달의 건전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협동조합과 전환마을을 별개로 평가해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는 시청에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산업과(062-613-32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입 기자단 차담회 이윤성 광주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꾸려 인공지능 대표 도시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쟁걸음

인구감소 16개 군과 협의체 구성 맞춤형 사업 발굴 나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인구 감소하고 있는 16개 군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효과·효

율성, 실현가능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개년 사업비로 최대 280억원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6개 인구감소지역 기금 담당 실과장,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로, 전남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16개 군이 해당된다.

협의체는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투자계획 수립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투자계획을 오는 5월까지 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 등을 거쳐 8월 배분 금액을 확정한다.

또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광역단위 프로젝트 등도 협의해 '전남형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발굴한다.

전남도는 광역지원계정 2개년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전환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을 실시해 전남도 지자체가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소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 시·도,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시지역 18곳이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건설공사 현장 점검 15일부터 200여 개소 대상

광주시는 "관내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재해예방지도전문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 점검반을 편성에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등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민간 건축물 공사현장 2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시공·품질·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비롯해 감리원의 현장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정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시정 지시에 대한 불이행 또는 주요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부실공사를 적절하고, 안전한 광주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